

제17차 충남경제모니터링 포럼 토론자료

I. 2023년 4분기 충남경제 부문별 현황

1. 충남경제 전반
2. 부문별 현황

II. 2023년 주요 이슈 및 충남 대응 방향

1. 차이나리스크 & 탈 중국화
2. 탄소중립 & 친환경 경제 가속화
3. 고금리 & 신용경색으로 기업 자금난 악화
4.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설문. 2023년 충남경제 부문별 전망

※ 작성하셔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I. 2023년 4분기 충남경제 부문별 동향

1. 충남경제 전반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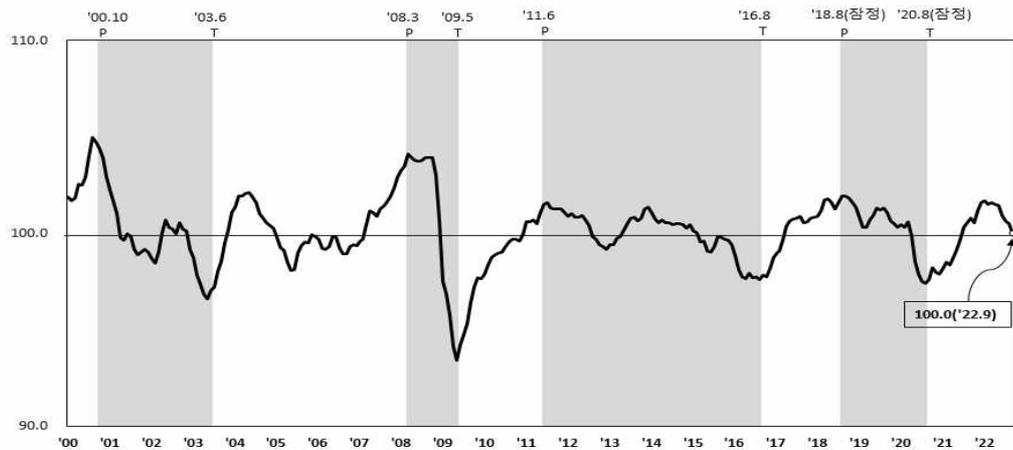
- (경기종합지수) 충남의 현재 경기는 디스플레이 산업 재편에 따른 생산량 낙폭 완화, 내수 소비 개선, 중간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반도체 수출 감소, 전력판매량 감소, 국제유가 안정화에 따른 수입액 감소 등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

* 9월 기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충남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100.0(전월대비 -0.5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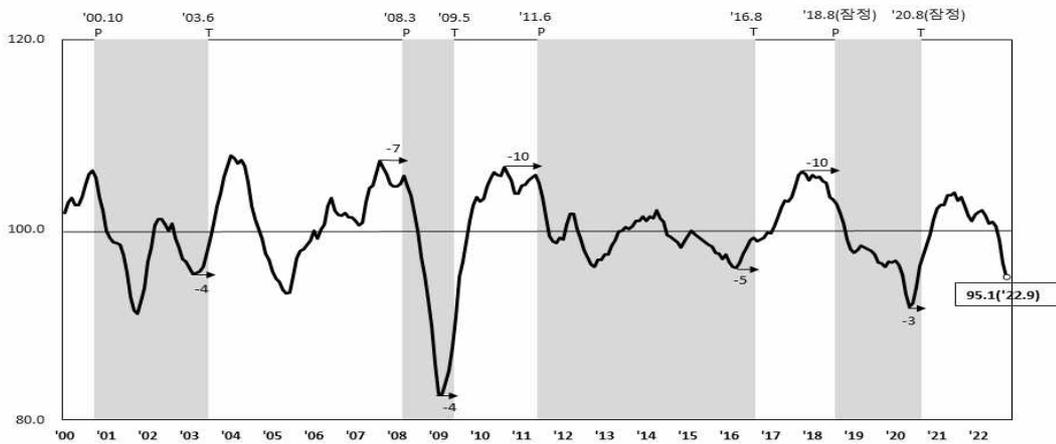
- 제조업 중심의 신규구인 증가와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자본재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 증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출하 감소, 주가지수 하락 등이 이어지며, 향후 경기 역시 당분간 둔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

* 9월 기준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충남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95.1(전월대비 -1.4p 하락)

충남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충남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충청남도·충남연구원, 2022년 9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2022.11월 발행)

○ (충청남도 경기심리지수¹⁾) 11월 체감(91.2), 12월 전망(95.8) 모두 위축

- (부문별) 도내 중소기업 경기는 신규수주·내수판매·자금사정 등 주요 부문 개선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구입가격·설비투자·인력사정 등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으로 체감 및 전망은 기준치를 소폭 하회
-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대면소비 회복 요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재고, 자금사정 등 경기 전반에 걸쳐 체감 및 전망 경기가 상승. 3개월 연속 경기 호전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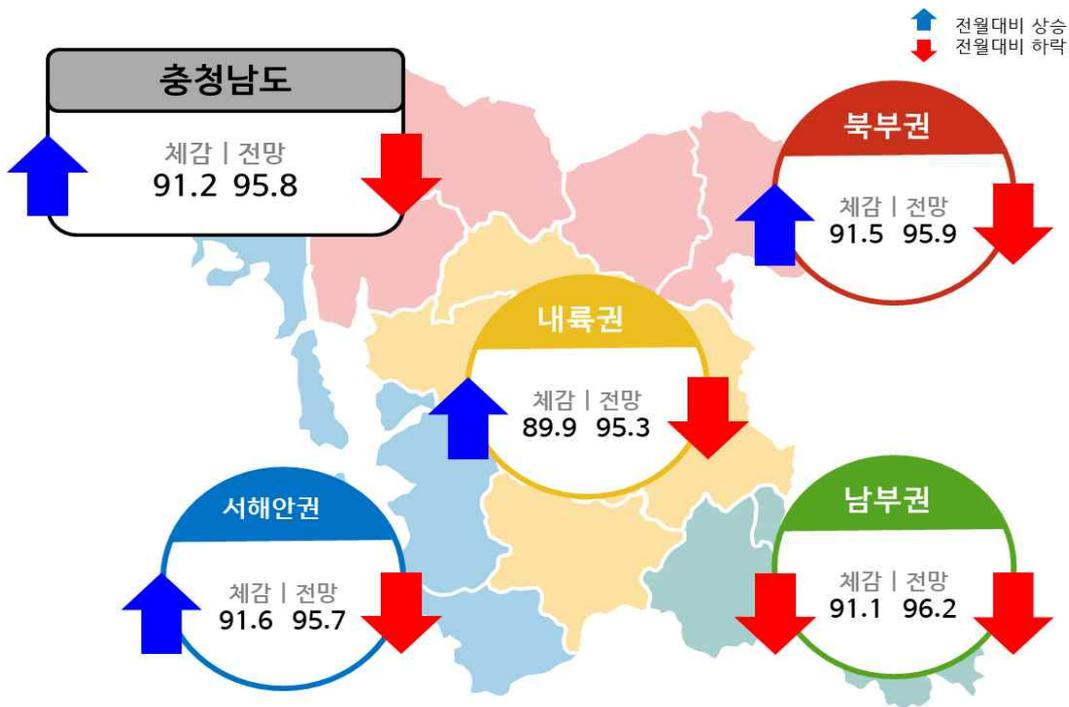
1) 충청남도 경기심리지수는 매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체감경기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낮으면) 경기 호전(악화)을 판단·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금년 3분기 추석 명절효과, 지역축제 활성화, 김장철 특수 등이 이어지며 대면 소비 활동이 일부 회복,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 및 전망 경기의 뚜렷한 호전세를 견인

- 소비자 경기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등이 기준치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위축
- (권역별) 북부·서해안·내륙권 체감경기 전월대비 상승,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 하회하며 위축상황을 지속, 전망 경기는 모두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지난달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던 남부권의 소비자 경기는 당월 여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

충청남도 경기심리지수 권역별 현황('22년 11월 체감, 12월 전망)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2022년 11월 충청남도 경기심리지수

2. 부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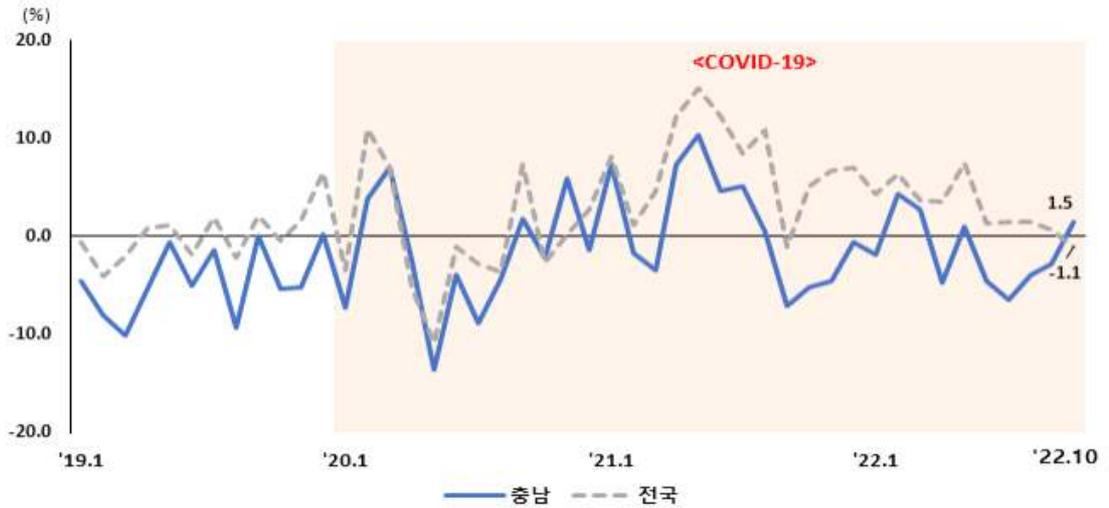
[산업생산]

○ 충남 산업 생산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추세와 함께 잠시 주춤

자동차 생산 완전한 회복 / 전자부품 생산은 산업 재편, 수요 부진으로 위축

⇒ 대외 불확실성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이 가세될 경우 일부 업종에 일시적 제약 발생할 가능성 다분.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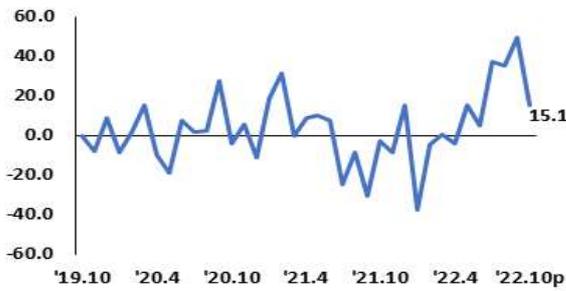
충남-전국 제조업 생산지수(전년동월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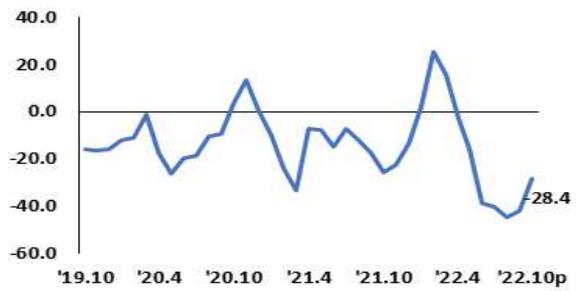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_산업생산지수

○ 핵심 제조업(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화학제품, 1차금속)이 충남 전체 산업생산 흐름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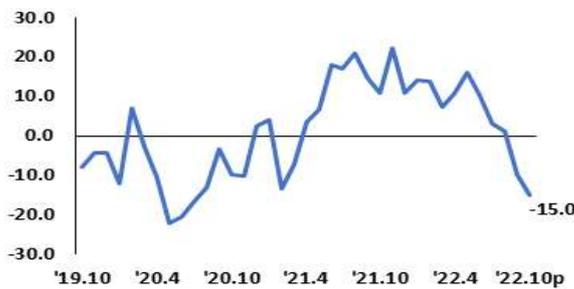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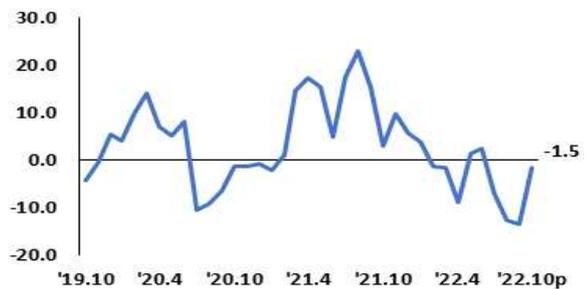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료: 통계청_산업생산지수

-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품 수급난, 설비 변경에 따른 가동중단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나 있으나, 최근 부품난 완화, 가동 재개 등에 힘입어 완전한 회복 추세(11월부터 현대 아산공장 그랜저 풀체인지 본격 생산 예정)
- (전자부품) 디스플레이산업의 재편, 수요부진, 비수기 요인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석유정제품) 지난해 코로나19 수혜(가전/포장/위생 등 화학제품 수요 증대)로 인한 기저효과 소멸, 재고조정 등으로 감소세 지속
- (1차금속) 9월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당진, 현대제철 파업)

○ 5대 핵심산업 동향

- ① **(반도체)** 내년 1분기까지 재고 소진 정책 추진, 메모리반도체 경기는 하강 자동차용, 가전 등 반도체 칩 개발 착수 등 신규 분야 투자는 활발
- 하반기 빠른 D램, 낸드플래시 수요 감소,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선제적으로 가동률 조정
 - * 마이크론 2023년 반도체 20% 감산 결정
 - * 삼성전자 인위적인 생산감소는 일축하였으나 화성캠퍼스 일부 낸드플래시 생산설비 조정·재배치 진행
 - 장기 데이터센터 수요는 증가 예상되나 인텔 새 서버용 CPU 출시 재연기로 빅테크 기업의 투자가 지연 → 서버용 D램·낸드플래시 수요 주춤
 - SK하이닉스 내년 반도체 투자 규모 올해 대비 50% 급감 결정, 최근 시스템반도체 관련 투자가 완료된 지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
 - 다만, 생활가전용 카전(전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가전) 반도체 칩 개발과 실리콘카바이드(전력) 반도체 생산 확대 등 신규 반도체 수요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
 - 신규 분야에 대한 개발 수요는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인력 확보는 치열
 - * 미 반도체산업협회 인재육성법 : ①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에 투자 ②STEM 전공자를 반도체 업계로 유인 ③국적, 학력 등 조건없이 유연한 일자리 문화를 추구 ④재교육과 기술향상에 투자 ⑤예비학교 등의 지원으로 신규직원의 적응력 향상 도모
- ② **(디스플레이)** 애플 생산지연, 전방(가전 등) 산업 위축,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 기업 부침 예상, 신소재 투자는 지속
-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정저우시)에 따른 애플의 생산 감소 본격화

- * 정저우시 폭스콘 공장 약 20만명이 고용된 아이폰 위탁생산업체로 아이폰14 시리즈의 약 80%를 생산, 이번 사태로 올해만 약 200~300만대 생산 감소가 예상
- * 이후 중국정부는 11월 30일부터 정저우시 전면 봉쇄를 해제하였으나 애플의 탈중국 정책은 본격화될 것
- 코로나19 수혜로 판매가 증가했던 가전제품의 판매 둔화가 나타나며 금년 삼성, LG 등 가전부문 재고량 증가
- OLED 전환에 따른 LCD 관련 협력업체 등의 생산량 감소 본격화,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에 따른 지역 여파도 지속
 - * 지역 LCD액정 보호필름 제작업체 지난 7월부터 수주 전문, 유급휴직에 돌입
 - * LG전자 휴대폰 납품업체 사업전환에 고전, 지역 상장사인 유티아이도 매출과 영업이익 급감
-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고급 또는 저가폰만 판매가 증가, 보급형 판매 부진), 이태원참사 충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는 지속
- 다만, 디스플레이 등 신소재 부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
 - * 한화솔루션 OLED 패널 증축용 소재 투자 협약(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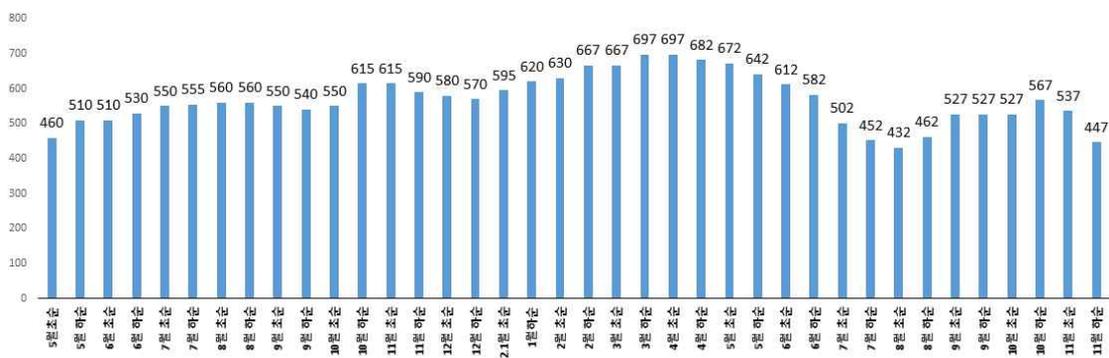
③ (철강) 단기 철근 재고량 증가, 고공행진하던 철스크랩 가격 하향 조정

-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량 출하가 지연되며 제강사 단기 철근 재고량 9월 이후 확대치 기록, 다만 20만톤 수준은 하회
- 철스크랩 가격 인하*로 12월 철근기준 가격 톤당 1만 6000원** 인하, 건설업계 등 비용 부담이 소폭 완화될 것

* 현대제철 10월 5일(1만원), 7일(2만원) 구매단가 인하에 이어 최근까지 저가 입찰 실시

** SD400(두께10mm) 강종

- 시중 유통가격은 톤당 102만원~103만원로 다만, 수입철근가도 급락하고 있어 국내 유통사 부담은 가중



자료 : 한국철스크랩거래소(현대제철 당진 기준)

- 제강사의 가격 이원화 정책으로 대형건설사가 아닌 기타 건설사 등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직거래(대형건설사) 96만8천원, 유통사 104만 8천원으로 유통사 역마진 발생,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사는 가격 인하에 대한 체감은 미미

- 주요 산업의 원자재가 되는 주요 철강제품의 가격은 철스크랩 가격에 연동하여 움직일 것

* 최근 주요 제강사 탄소감축을 위해 전기로 생산을 증가(포스코 내년부터 전기로 2기 신설 추진 등) 철스크랩 가격 변동성 확대가 예상

* 주요 건설업계의 원료인 철근이 주로 전기로에서 생산됨에 따라 철근가격의 변동성도 확대가 예상, 다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가속화되며 철스크랩 가격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단기 철근가격의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

④ (자동차) 금리인상, 소비위축 등 자동차 시장 둔화, IRA 유예 무산될 경우, 수출 감소로 직결

- 금년 10월 누계 국내 자동차 생산은 3,023천대(전년동기대비 6.5%), 내수 1,136천대(전년동기대비 -4.3%), 수출 1,865천대(전년동기대비 10.9%)

- 현재 정부는 IRA 3년 유예를 공식적으로 요구(11/4)

- 충남은 아이오닉6 생산이 본격화되며 수출용 쏘나타 생산 등이 급감하며 내수 중심의 판매구조 강화

* 현대차 주요 차종 내수 판매량 : 그랜저 4,661대(21.10월 9,448대), 아이오닉6 3,667대(신차), 쏘나타 3,323대(21.10월 6,136대) 판매

- 2023년 자동차 생산 전년대비 3.0% 감소 전망(자료: EBM칼럼, 불확실한 2023년 자동차산업 전망)

* 2020년 이후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더라도 금융위기나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 국면을 피한다면, 이월 주문물량으로 감소폭은 완회될 것으로 예상되나

* IRA 적용 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수출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⑤ (정제 및 석유화학) 수요둔화·공급과잉·원가상승 등 삼중고 직면, 다만, 합작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 활발, 안전을 위한 ICT 기술 도입

- 공격적인 에틸렌 생산시설 증가(정제업의 석유화학 진출 등),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상승,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기초유분 가격 하락 등 전년대비 주요 석유화학기업 영업이익 급감

* 금년 3분기 기준(전년동기비) 주요 기업 영업이익 추이 : 한화솔루션(1,197억원, -55.1%), LG화학(930억원, -91.4%), 롯데케미칼(-4239억원, -247.0%), 금호석유화학(2305억원, -63.1%)

- * 금년 주요 기업 나프타 공정가동률(3분기 기준 전년동기차) : 한화솔루션(96.6%, 1.0%p), LG화학(84.0%, -9.3%p), 롯데케미칼(84.0%, -9.0%p), 금호석유화학(70.0%, -17.0%p)
- 생산량 조절을 위해 정기보수 기간을 늘리거나 투자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 지역 동향을 보면, 현대케미칼 중질유 석유화학설비 공장 준공(HPC프로젝트: 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
 - * 연간 에틸렌 85만톤, 프로필렌 50만톤 생산, 국내 최초로 정유공정 부산물인 탈황중질유를 원료로 사용, 원가경쟁력 강점
 - * 현대오일뱅크 사업다각화 : 올레핀 계열(합성수지) 진출(기존 방향족제품만 생산), 정제에서 석유화학으로 다운스트림 사업 확대 중
- 한화토탈에너지스, 가상공간_쌍둥이 공장 설립
 - * 전 공정 자동화 설립 구축, ICT 기술도입으로 사고 줄이고, 효율 높이는 작업 중
 - * 모든 단지 항공촬영 후 디지털 지도로 구현, 중요 설비 위치 지도위에 시각화
 - * 더불어 정기보수 기간 중 비대면 업무 확장을 위해 무선 커뮤니케이션 장비인 스마트 글래스 도입,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가상면접장 구축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접목 중
- 한화토탈에너지스, POE 사업진출
 - *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 ESG 경영 내재화 추진
 - *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태양광 필름, 자동차용범퍼소재, 신발 충격흡수층, 전선 피복재 등에 쓰이는 고부가 합성수지) 파일럿 프로젝트 공사 진행 중

[대외거래]

- 충남 수출액 규모 전년동월대비 4개월 연속 감소
 - ⇒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러-우 전쟁 장기화, 코로나 19 중국 봉쇄조치 등의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충남 수출의 경우 내수용 전기차(아이오닉6)로의 생산 전환에 따른 자동차 수출 감소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업계의 지속되는 수요 둔화 및 경기침체 영향이 주로 작용
- 충남 수입액 역시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축소
 - 수입은 원유,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 정밀화학원료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광물성 원료) 중심의 구조

⇒ 주요국의 원자재 수급 조절 방침 및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무역수지 흑자는 여전하나, 규모 자체는 전년동월대비 5개월 연속 감소

* 한편, 전국 무역수지의 경우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별 통계

[고용]

○ 충남 도내 고용지표 양호한 흐름, 다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회복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

-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 양호한 흐름 지속
- 다만, 기저효과 영향과 더불어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 회복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

* '22.10월 충남 고용지표 : 경제활동인구(1,304천명, 3.7%), 취업자(1,283천명, 3.5%), 고용률(67.1%, 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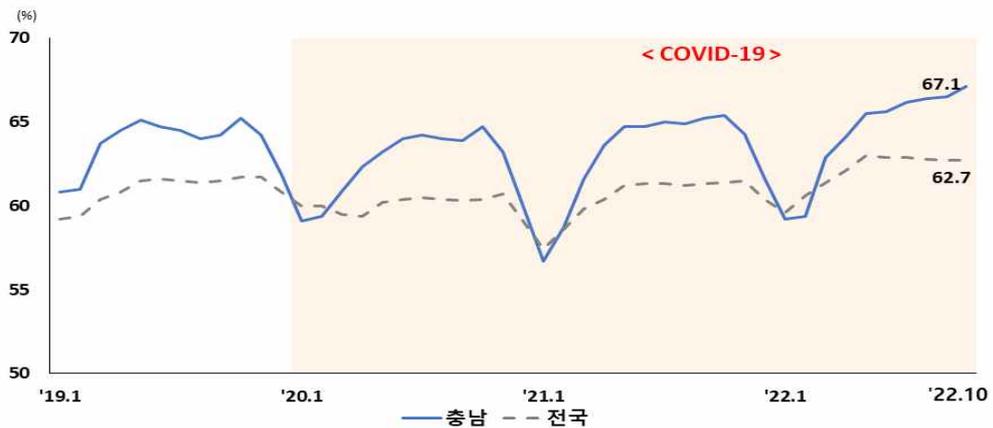
○ 도소매·숙박음식업의 회복과 안정적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영세화 진행 중

-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종의 취업자수가 소비 수요 회복(지역축제 활성화, 명절, 김장철)에 힘입어 증가폭 확대
- 한편,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우려와 함께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하반기 이후 다시금 증가

-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표하는 상용직이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질적 개선세 시현
- 한편, 코로나19로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직접일자리, 방역인력 등은 점차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모습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며 영세화가 진행되는 모습

충남-전국 고용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물가]

○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로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둔화

* '22.11월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0.1(5.5%), 생활물가지수 111.8(5.7%), 신선식품지수 108.3(3.3%)

* 동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5.0% 상승,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전국 4위

- 곡물, 채소, 과일 등 농산물과 더불어 축산물, 수산물의 전반적인 수급 개선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 지난달 OPEC의 감산 결정에 이어 중국의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으로 국제유가 안정세 지속되며 충남 석유류 가격 상승폭 역시 크게 둔화

* 충남 석유류 물가 변동 추이(전년동월비, %) : '22.1월(18.0), 3월(32.7), 6월(41.6), 11월(8.8)

- 대면 활동 정상화되며 외식 수요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서비스 물가는 높은 상승 압력 지속(다만 11월 여가수요 비수기 요인으로 상승폭은 소폭 둔화)

*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22.11월 기준, 전년동월비)

총지수	상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5.5%	6.7%	1.6%	6.5%	21.9%	4.1%	2.1%	-0.5%	8.0%

⇒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의 오름세가 둔화된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겨울철 기온 변화 등 신선식품 가격 변동요인은 상존

전국-충남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비,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II. 2023년 주요 이슈 및 충남 대응 방향

1. 차이나리스크 & 탈 중국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독재체제 구축으로 민간경제 규제 강화 전망

- 분배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중국식 현대화 강조, 지난 40여 년간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며 경제 고성장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통해 분배를 강화한 시장 규제가 있을 것임을 암시
- 반(反)시장 정책과 대외 강경 노선에 대한 불안감에 글로벌 자본이 중국을 이탈하는 ‘차이나 런’ 발생, 그러나 곧바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외자 유치 촉진 전략 발표

⇒ 경제정책의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과 사회주의 정치노선에 따른 분배정책 강화는 기업과 자본 양쪽에 영향, 탈 중국화 시작

○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봉쇄 조치 강화로 경제적 침체 지속

- 중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명이 넘어가면서 봉쇄 지역이 증가하고 기간도 늘어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사회적 갈등도 발생
- 중국 정부는 작년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처를 중국 공산당의 체제 우월성 선전용으로 활용, 의료 시설이 취약한 부분도 영향

⇒ 봉쇄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소비감소와 생산 및 유통 제약으로 경제 침체 지속, 봉쇄 지역의 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유럽핵심원자재법(CRMA) 제정 선언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 가속

- 미국의 IRA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친환경에너지 산업 관련 제조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한 목적
- 유럽의 CRMA도 희토류, 리튬 등 핵심 광물들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급망 구축이 목적

⇒ 두 법안 모두 대중국 견제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중국 부동산 발 금융 리스크 확대, 중국 진출 기업 한계상황 직면

- 중국 금융시스템이 부동산 부문의 부진과 경기둔화로 리스크 증가(무디스, 12.2), 중국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격 하락, 투자 감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가 증가

- 중국에 진출한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중국법인의 연체 잔액은 약 3,045억 원, 지난해 말 대비 46% 증가, 2019년 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함(22년 8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

⇒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중국 진출 한국기업 한계상황 직면으로 탈 중국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반면 중국 이탈 해외기업이나 자본의 한국 유치는 중요한 과제이자 기회

- 중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아시아에 기반을 둔 해외기업 및 자본을 인접한 국내로 유치하는 전략 필요

-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차이나런 시작, 그러나 미중 정상 회담 이후 주춤, 최근 코로나19 봉쇄정책 완화로 차이나런 효과 약화

⇒ 중국이 다양한 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전에 적극적인 국내 유치가 필요

○ 중국의 제조업 기술 향상으로 소비재 수출은 감소, 기술집약 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국 의존도는 증가

- 중국이 과거와 달리 지속적인 제조업 기술의 향상으로 수출의 구도가 바뀌고 있음, 이에 따른 별도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최근 중국의 면세산업 육성이 시작되면서, 국내 면세산업의 주 고객인 중국인이 자국으로 이탈, 관련 산업의 위축 우려

- 중국 하이난섬 면세 지역 지정(2020), 자국민에게 외국인과 동등한 면세 혜택을 주면서 국내 면세산업에 타격

○ 중국의 정치 경제적 변화는 對중국 수출입 비중이 큰 충남에 직·간접적 영향 우려

- 충남 對중국 수출 비중 23.2%(1위), 주요 품목은 메모리반도체, OLED / 충남 對중국 수입 비중 9.7%(2위), 주요 품목은 무기화학품, 자동차부품(한국무역협회, 22.10월 기준)

⇒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규제나 유통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한다면 충남 주력 산업에 피해 우려

* 對중국 수출 비중: [충남 '15년 43.9% → '19년 29.3% → '22.10월 23.2% [전국 '15년 26.0% → '19년 25.1% → '22.10월 23.1%

* 對중국 수입 비중: [충남 '15년 11.6% → '19년 10.8% → '22.10월 9.7% [전국 '15년 20.7% → '19년 21.3% → '22.10월 21.3%

○ 충남은 중국과 인접하고 무역거래가 많아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따라서 중국의 동향과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탈 중국에 대한 대응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

나. 정책방향

○ (정부) 對 중국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중요, 주요 전략물자 관련 공급망 대응과 중국 이탈 해외자본 및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수출입 품목에 대한 규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라, 요소수 사태와 유사한 위기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교적 대응과 공급망 측면의 대응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임

- 또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매력적인 요소이나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하고 IT 기반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아시아 거점 형태의 법인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음

○ (충남 대응방향) 중국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운영

- 도내 對중국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

- 또한 탈 중국 기업 도내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유턴 기업에 대한 탐색과 정보수집도 중요한 과제임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원자재별 수입처 list 관리와 위기시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구축도 중요
- ⇒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투자 통상 다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국 내 해외사무소 설립 및 전문가 연계 운영(KOTRA-충남도-민간건설팅기업)을 제안

2. 탄소중립 & 친환경 경제 가속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은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 밀집지역임
 - 태안에 서부발전 10기, 당진에 동서발전 10기, 보령에 중부발전 8기 등 29기가 있으며 전국 발전량 19.8GW의 48%인 9.6GW를 발전가동 중
 - 충남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45년까지 29기 폐쇄하거나 발전을 중단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문제점이 대두됨
- 충남 탈석탄을 경제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100억원은 충남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
 - 도 30%, 시군40%, 발전3사 30% 기여로 2025년까지 조성계획(독일의 경우 「독일 석탄 지역 구조전환 법률」에 따라 한화 55조원 기금 마련 예정)
- 수소경제는 탄소중립경제 실현과 맞물려 충남 일자리 문제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
 - 글로벌 수소수요 대부분은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송·건물·발전용으로 활용처가 점차 확대되어 2050년 수요는 546백만톤 규모로 예상됨
 - 수소차·연료전지 분야 기업간 기술경쟁이 치열, 개별국가의 기술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2030년까지 최소 40GW의 수전해 장치를 설치하고 최대 1천만 톤의 청정수소 생산을 지원할 계획

* EU 수소경제 규모를 2021년 기준 20억 유로(약 2조 7,0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1,400억 유로(약 190조 원)로 증액하고 일자리 14만 개를 창출할 계획

- 충남의 경우 기 구축된 송전선, 변전소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발전 및 수소발전에 활용할 필요

나.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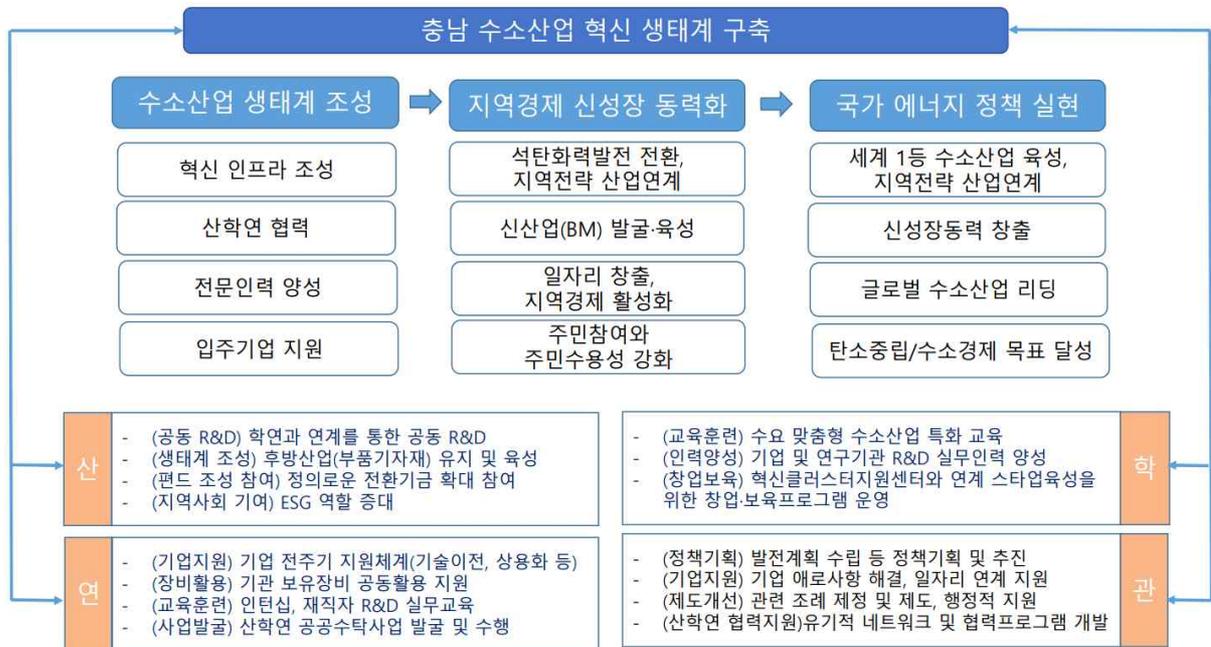
- (정부) 지난 11월 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인프라 구축 강화, 수소 활용 확대,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심의·의결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에 따라 수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4대 전략 중점 추진
 - (1) (기술) 7대 전략분야 기반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2) (생태계) 기업 육성, 금융·세제 지원, 인력양성 및 클러스터 구축
 - (3) (규제) 규제개선 건의를 상시로 발굴·개선하며 신속한 안전기준 마련
 - (4) (수출산업화) 5대 유망분야의 산업화 촉진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충남 대응방향) 충남은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망 전략과 공공투자사업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3 거점 전략에 따라 제1 거점으로 서산 중심의 인프라 거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2 거점으로 당진, 보령, 서산 등을 중심으로 서해안 중심의 수소 거점 산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3 거점으로 논산, 청양 등을 중심으로 북방산단 연계 및 폐열 난방용 가동 산업을 계획 중
- (충남 정책 제안)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와의 결합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정의로운 기금이 조정되어야 하며, 수소경제를 충남도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기초지자체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할 필요
- 탄소중립 특별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100억 규모의 정의로운 기금을 최소 3~5조원 규모로 상향 조정할 필요

- 기간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지역 발전 전략에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두는 충남 경제발전전략으로 재구성하며,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단위의 연구 개발을 수소혁신 클러스터내 입지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

* (예) 현재 : 공주대에서 생산, 단국대에서 수전해 및 전기회로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산학연 체제를 잠재인력, 예비인력 구조로 변환하고 수소혁신 클러스터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취창업 네트워크를 강화시킴

- 에너지경제과 내에 팀단위에서 수소경제과 단위로 격상, 수소경제를 전담부서 신설 검토

* (예) 현재 기초단체단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 차원에서 조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1) 충남경제진흥원 혹은 충남TP에 전담부서 신설하거나, (2) 충남수소경제청 신설을 고려[(물류·액화수소시설 등) 수소산업 관련 투자유치 전략 및 연구소, 민간투자기업 등을 총괄하는 “청” 단위의 전담조직이 필요]



3. 고금리 & 신용경색으로 기업 자금난 악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미국 금리인상 지속, 내년까지도 인상 사이클 지속 전망, 국내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 퍼펙트 스톱 우려

-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의 최근 연설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가 필요

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12월에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올해 더 이상의 금리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되는 한 내년에도 금리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금리 : 2021년 11월 0.125% → 2022년 12월 4.375%, 소비자물가지수 11월 127.47 → 136.67(2022년 10월) vs. 한국의 금리 같은 기간 1% → 3.25%, 소비자물가지수 120.26 → 126.44 ⇒ 실질금리는 21년 11월 기준 미국 -0.37%(한국 +0.49%), 2022년 10월 기준 미국 +2.72%(한국 2.75%)

- 한국은행도 지난 4월 이후 여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 미국과의 금리인상 격차를 줄이면서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도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요인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있음

⇒ OECD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8%로 제시, 한국은행도 1.7%로 제시하는 등 1%대로 하향 조정, 노무라증권의 경우 역성장을 전망하는 등 고물가 저성장 기조 속에 수출 증가세 감소, 고금리 여파에 투자 및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복합적인 위기(퍼펙트 스톱) 우려

○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 자금난 심각, 건설에서 시작 다른 산업에 파급

-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부실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우려, 부동산 경기 악화는 경제 시스템 전반에 악재
-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기업들은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면서 금융권 대출로 방향을 전환, 대기업도 제2금융권 대출 3조원 돌파(금융감독원)

*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54조원 만기(금융투자협회)

- 충남도내 기업 채권의 표면금리도 급증 : 올해 10월 기준 6% 수준에서 11월 7.26%(그린케미칼), 평화장갑무역(7.35%), 미라이후손관거(9.61%) 등 이자 부담 상승

⇒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건설사와 관련된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산업까지 확산, 경제 전반의 악순환 시작

○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로 추가 대출 실행(충남 패널조사 부가조사, 22.10월 기준)

-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조사결과 개인 금융만 보유한 경우 대출금 규모는 감소 하였으나, 정책 금융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였음

* 패널조사 부가조사 실시(4월, 10월) 결과

- 또한 대출을 보유한 10명 중 6명이 향후 상환에 부침을 예상한다고 응답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대출로 한계상황에 직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가 위기

나. 정책방향

○ (정부) 대내외 금융 리스크(금리, 신용) 관리, 채권시장 안정화 등 유동성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집행

- 정부는 대외로부터의 금융 리스크가 올 경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각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또한 현재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경기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충남 대응방향) 정부 지원정책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차별화된 정책 지원

- 소상공인은 기존의 지원금 지급보다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 자생력을 높이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 예시 : 디지털화(정부정책연계), 퇴로(폐업/재창업 → 크레딧 제도) 지원, 재교육 후 취업, 창업 등

* 크레딧 제도(안) : 폐업하는 업체의 기자재를 감정하여 업주에게 크레딧 부여, 향후 재창업시 크레딧에 따른 기자재를 확보 가능, 창업 준비기간에 기자재 대여에 따른 대여료 지급 등도 가능

- 중소기업은 자금 경색에 따른 위기가 우려되는 바 선별적인 자금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 기업 상황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화(기존 정책을 조합), 정부 정책자금+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4.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가.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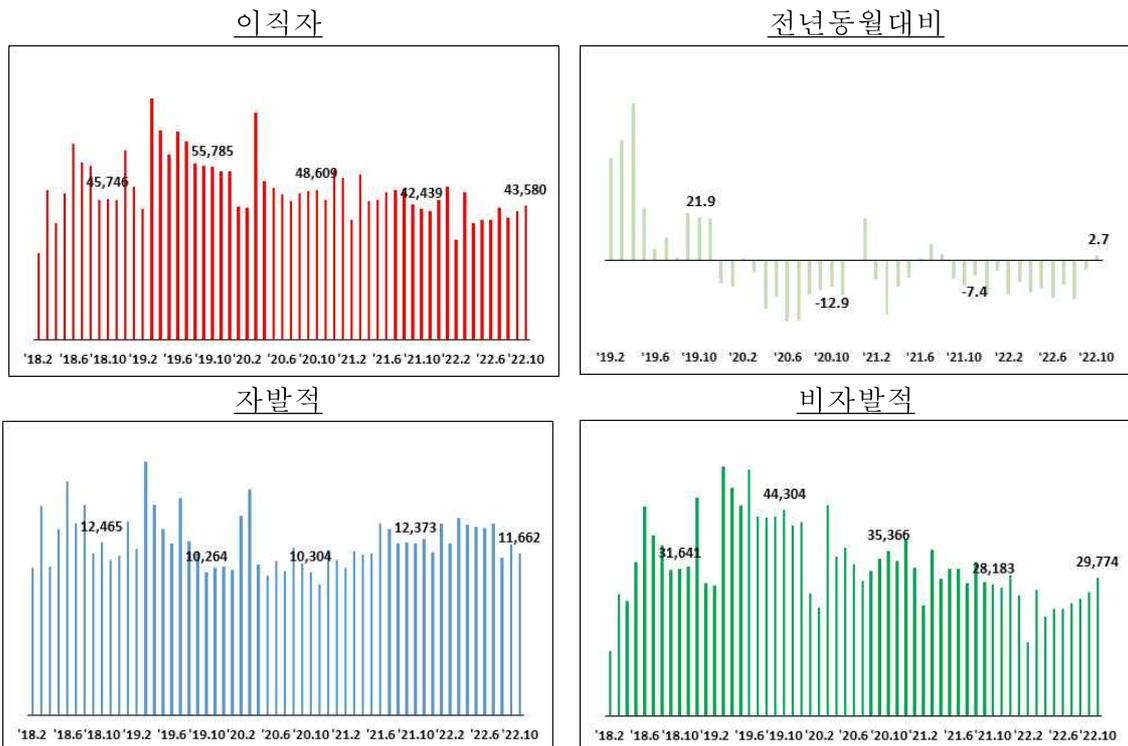
○ (노동시장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더딘 회복, 하지만 사회환경 변화 대응력은 강화, 노동시장 경직, 중소기업의 필수 인력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은 증가

- 상대적으로 견조한 제조업, 서비스업은 변동성 확대(급격한 위축과 회복 시현)
- 부동산업(경기둔화·가격안정 정책으로 노동공급 급감), 정보통신업(ICT인재 부족, 노동수요 급증)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시차가 축소
- 전반적으로 이직자 감소하며 노동시장은 경직 → 회복기 자발적 이직이 증가하며 필수 인력이 이동하는 모습, 기업의 인력 채용·유지를 위한 비용은 증가 → 최근 자발적 이직은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하는 모습

* 22년 월평균 이직자 41,236명(22.10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1.5%)

* 필수인력(숙련인력, 대리급) 등은 경기침체기 이직활동이 약화되는 반면, 신입 또는 비전문인력 등은 침체기 이직을 서두르는 경향 뚜렷 → 이직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자발적 이직)의 이직은 점차 줄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택한 사람들의 이직은 증가

충남 노동시장 이직 동향(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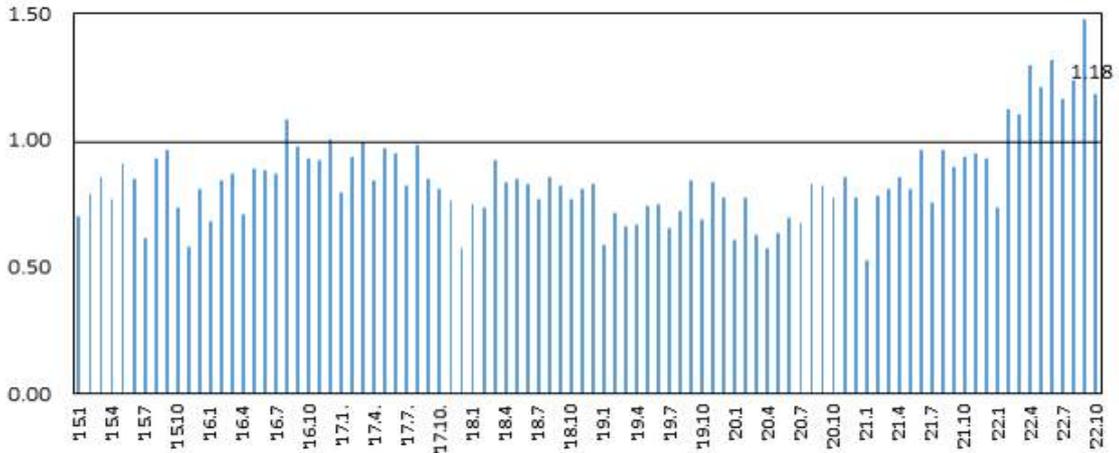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1인 이상)

○ (일자리 변화) 위기 이후 기저효과로 구인배율 1을 상회, 빈일자리수²⁾는 증가한 반면 채용은 감소

-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요가 증가하며 구인배율 1을 상회

충남 구인배율 추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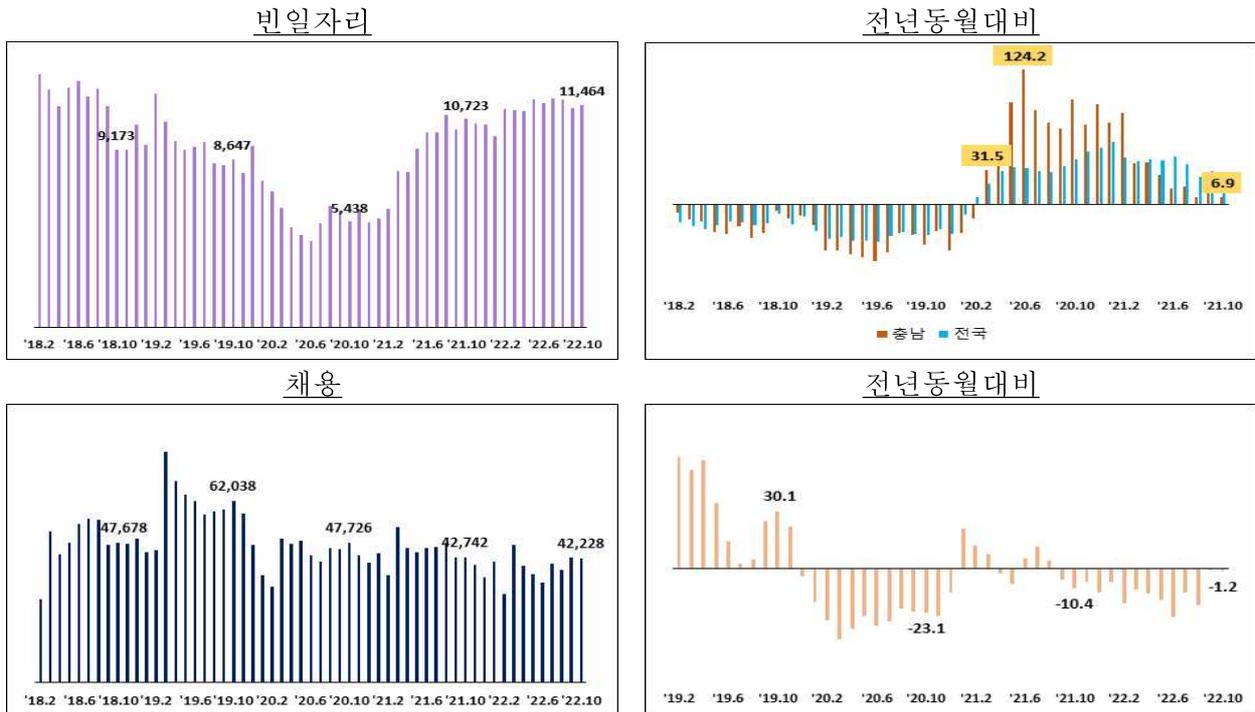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통계
주 : 구인배율 = 구인인원/구직인원을 의미함.

- 빈일자리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산업에서는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현상 대두

* 22년 월평균 빈일자리수 11,293개(전년동기대비 26.9%) / 채용 39,378명(전년동기대비 -12.5%)

충남 빈일자리 및 채용 추이(개, 명,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1인 이상)

2) 현재 비어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

○ (인력수급불균형 현황)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인력부족 현상 심화, 중소기업·저숙련 일자리 구인난은 구조적 문제로 대두

- 지역 주력산업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입지, 대기업 선호현상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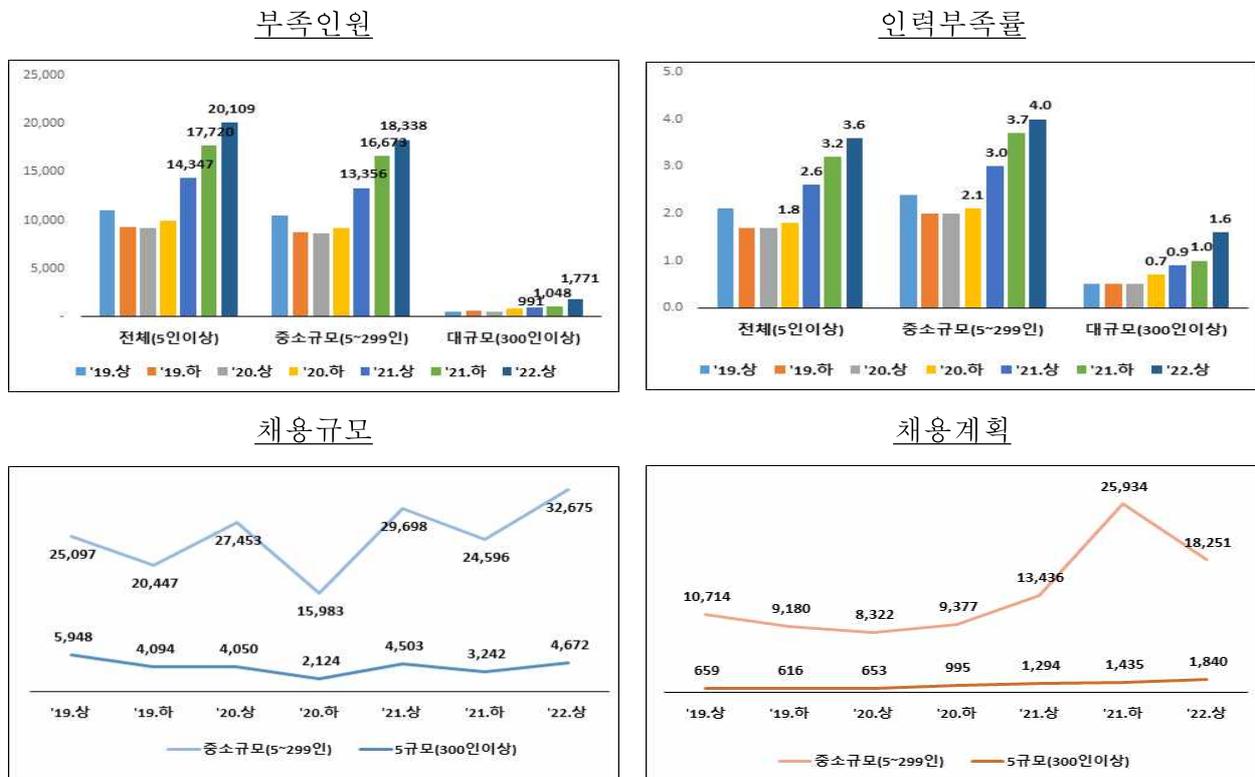
* 미충원인력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체간 인력유치 경쟁심화, 필요직능 불일치라 응답

- 저숙련 일자리는 구인난, 대체로 기업들은 고졸 이하 또는 전문대졸 수준을 원하고 있으나 지역의 직업계고 졸업자 중 1/4이 미취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은 심화

* 충남 직업계고 졸업자의 약 24.6%가 미취업(전국 2위 수준, 1위 세종), 미취업률(미취업자/취업자+미취업자*100)은 약 42.9%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22년 1월 및 2월 졸업자 기준)

-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채용계획 인원도 감소하고 있어 인력수급 차질은 불가피

규모별 인력수급 현황(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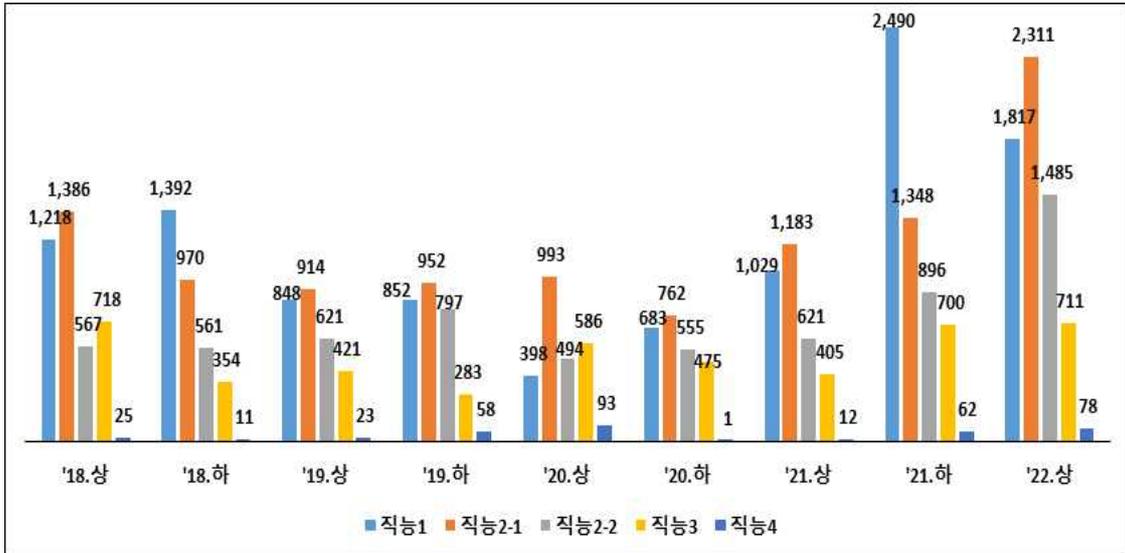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부족률=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주 : 부족률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체 인력에 대한 부족인원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력 도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장형 인력 수급을 위한 체계 구축, 중앙정부 노동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중요

규모별·직능별 미충원인력(명)



자료: 워크넷 통계, 한국고용정보원

주 : 직능1(신입, 자격증 무, 중졸이하 수준), 직능2-1(경력 1년미만, 기능사, 고졸수준), 직능2-2(경력1-2년,산업기사, 전문대졸 수준), 직능3(경력 2-10년, 기사, 대졸 또는 석사), 직능4(경력 10년이상, 기술사, 박사수준)

나. 정책방향

○ (정부) 지역고용정책 재원의 유연한 배분과 정책활용 범위의 개편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안정패키지, 고용위기지원 등)의 경우, 중앙정부에 (기초)지자체가 공모를 참여, 매칭을 위한 재원도 필요한 상황
-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과 활용가능한 인재(사업공모 능력),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에 예산범위내 공모사업은 지역 고용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존재

* 고용노동부 제도 운영·평가 / (기초)지자체는 사업공모&비율별 재정매칭

- 지역 고용정책을 위한 필수부분에 대한 재정 이관을 통해 자율성 강화와 정책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충남 대응방향)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산학연 협의체 구성,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① 대기업 참여 확대,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산업별 확대·개편 제안

- 충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계구조가 명확한 산업구조로 각 산업별 구조에서 연계된 기업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가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산업별 조성을 통해 대기업

참여를 유도,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

- * MZ세대는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인간관계, 여가 등도 중요한 노동조건, 복리후생을 통한 임금 보전 역할 강화가 필요

* 현재 충남공동복지기금의 운영

-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5호 추진 중
- 2021년 1호(예산,보령,공주), 2022년 5월 2·3호, 2023년 4·6호(4호 청양군, 5호 부여군 추진 중)
- 지역 중소기업, 충남도, 산업인력공단 등이 참여, 2023년 기금 규모 총 22억원 조성 예정
- 현재 명절휴가비 지원 등 → 기숙사 등 정주여건 개선, 문화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형태 발굴

- 더불어 글로벌 이슈로 등장한 ESG는 기업의 사회책임을 넘어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대기업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내 벤처육성 지원을 중소 협력사로 확대하여 기회의 장을 마련

* 사내벤처활동 지원 단위를 단일 기업이 아닌 협력사 간 등으로 범위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2022년 기준) : 대기업 15개사, 중견기업 9개사, 중소기업 26개사, 공기업 12개사

② 현장 중심의 인력수급 체계 확보

- 교육청 중심 산학연 협의체 구성
- 현장 중심 인재육성 협력방안 마련 :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전달과 인식개선, 현장형 학제 개편을 통한 계층간사다리 역할(일학습연계, 지속성장) 강화
- (정보전달)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전달, 지역기업과 산업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학생·부모·선생님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세분화하여 진행 / 지속적인 홍보와 노출 중요
- (인식개선) 긍정적 이미지화(생산관리→오퍼레이터 / 따분한 유니폼 개선 등), 성공 스토리텔링 제작
- (학제 개편) 고등교육 4년제, 중·고통합과정, 종합고 등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 신규 프로그램 강화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P-TECH 과정 실효성 확보

- * 특성화고 - 옥길통합학교(부천), 내손통합학교(의왕)
- * 지역·산업·일자리 맞춤형 특성화고 설립 : 용인플랫폼시티 반도체고교 추진
- * 고교연계일학습병행제 : 고교과정+고등교육 연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 과정 연계
 - 도내 도제사업단 4개(천안공업고 기계사업단/예산전자공업고 전기·전자사업단/서산공업고 화학사업단/강경상업고 세무·회계사업단), 15개 학교 참여(중복 포함)

③ 도내 대학간 공동교육과정 신설·운영

-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한 산업간 융합지식이 필요
- 대학 중심의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 도내 대학별 우수한 분야별 역량을 집합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는 방안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활용(종합솔루션 조직, 대학협의회, 학회, 산업협회 등)하여 간접적 지원의 형태로 강화

(ex) “충남형 스마트팩토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시범사업

- 대상 : 스마트팩토리의 구축을 예정한 기업의 재직자
- 구성(협의체) : 지역대학과 기업, 전문지원조직(종합솔루션 조직), 충남도 등
- 육성분야 : 데이터활용·관리(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분야 지식 필요), 설비관리 등
- 단일대학 계약학과(X) → 지역내 대학간 경쟁력 있는 분야를 통합, 공동교육과정 신설
- 각 산업·회사별 설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팩토리 추진을 고려 중인 회사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이후 산업별 적용 사례를 포함하여 학제를 개편, 일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
- (기대효과) 미래산업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질 향상, 재직자 교육을 통한 기업내 계층이동(생산직·단순관리직→전문인력) 가능성 시사, 지역대학 위기 대처 등 다양한 사례로 활용 가능

* (사례) 한국석유화학협회-신성대(당진소재) 인력양성 파트너십 체결

- 화학공학과 신설, 현장직무 맞춤형교육, 기업전문가 겸임교수 활용
- 화학공학과 졸업생 상위 50% 대신화학단지내 7개 대기업(롯데케미칼, 롯데엠시스, LG 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우선채용 협의

설문 : 2023년 경제 부문별 전망

■ 현재 충남경제의 상황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2023년의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시) 충남경제 전반 (상반기 : 75 / 하반기 75)

이유 : 2023년 대내외 경제가 저성장, 침체로 전망되는 만큼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정부 정책 금융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가중될 것으로 판단, 하반기에도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유는 각 기관의 업무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소상공인 (상반기 : _____ / 하반기 : _____)

○ 이유 :

나. 중소기업 (상반기 : _____ / 하반기 : _____)

○ 이유 :

다. 고용(일자리) (상반기 : _____ / 하반기 : _____)

○ 이유 :

라. 가계소비 (상반기 : _____ / 하반기 : _____)

○ 이유 :

마. 충남경제 전반 (상반기 : _____ / 하반기 : _____)

○ 이유 :